

##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유형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기독교 경제윤리의 유형연구

- 교정적 측면에서 경제윤리의 유형
- 매개적 측면에서 경제윤리의 유형

### III. 강원돈의 경제윤리 방법론

- 리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방법론
-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방법론

### IV.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특징

- 리히와의 비교를 통한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
- 시장경제를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9.03>

\* 이 논문은 2024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 ABSTRACT •

---

A study on the types and methodologies of  
Kang Won Don's Christian economic ethics

Associate Prof., Choi, Kyung Suk (Namseoul University)

The theme of Kang Won Don's theology is Christian economic ethics. Since 1990, he has continued his academic journey by setting real-world economic issues as a subject of study from a consistent theological perspective. He recently wrote 『Christian Economic Ethic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ology, ethics, and social science. Kang Won Don's Christian economic ethics methodology is to establish theological humanity as a basic foundation, set theological criteria, and form and develop social systems with a feasible maxim. He establishes "economic democracy" as a maxim that can be realized in the real economy. In this sense, Kang Won-don's economic ethics can also be seen as belonging to the type of integration through which his human theory mediates between economics and ethics, based on theological humanity. In order to realize the plan of "economic democracy" to regulate the market economy socially and ecologically, workers' authority and position are important. In addition, an ecological constitutional order that specifies the rights of nature in the constitution must be established.

**Key words:** Kang Won Don, Christian Economic Ethics, Economic Democracy, Social Discipline, Ecological Discipline

---

## I. 들어가는 말

“경제가 운명”<sup>1)</sup>이 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과학기술의 현저한 발전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여전히 경제는 운명이고 문제이다. 운명과 문제로서의 경제는 어느 특정한 국가의 국민경제를 뛰어넘어 지구화 과정을 통해 지구의 운명과 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현실 경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의 분석에만 머문다면, 문제들의 해결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된다. 해결과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윤리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경제윤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경제윤리는 이미 그 단어에서 사회과학과 윤리학의 결합임을 의미한다. 신학적 관점에서 윤리적 판단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면, 기독교 경제윤리는 신학, 윤리학, 그리고 사회과학을 요구한다. 즉 최소한 두 분야의 학문에서 진행되는 간학문으로서 기독교 경제윤리는 각 분야에서 형성된 담론을 반성적 숙고를 통해 보다 인간부합적인 방향 속에서 제도를 형성하는 학문이다.<sup>2)</sup>

독일신학에서 경제윤리(Wirtschaftsethik)라는 표현은 게오르그 뵤시(Georg Wünsch)의 『개신교 경제윤리』<sup>3)</sup>에서 시작된다. 물론 개신교신학에서 고트프리트 트라우(Gottfried Traub)의 『윤리와 자본주의』<sup>4)</sup>가 경제윤리에 대한 연구로서 앞에서 있긴 하지만, 독일개신교는 19세기의 화두였던 사회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고뇌하면서 기독교 경제윤리를 논하기

1) Walther Rathenau, 1921년 독일 제국 산업연합(Reich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회의 연설, in: 동저자, *Gesammelte Reden* (Berlin, 1924), 264.

2) 이와 같은 견해로, Traugott Jähnichen, *Wirtschaftsethik. Konstellationen - Verantwortungsebene - Handlungsfelder* (Stuttgart: Kohlhammer, 2008), 45이하.

3) Georg Wünsch, *Evangelische Wirtschaftsethik* (Tübingen: Mohr Sieback, 1927)

4) Gottfried Traub, *Ethik und Kapitalismus. Grundzüge einer Sozialethik* (Heilbronn, 1905)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미일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또는 다른 언어권의 신학자들도 많으나, 특히 독일어권 신학에서 기독교 경제 윤리 방법론이 논의되는 연유인 셈이다. 특히 에른스트 트뢰치(Ernst Troeltsch)의 역사주의 방법론을 기초로 삼아 그를 상기시킨 하인츠-디트리히 벤트란트(Heinz-Dietrich Wendland)와 트루츠 렌토로프(Trutz Rendtorff), 그리고 이들을 계승한 스위스 신학자 아르투르 리히(Arthur Rich)가 언급될 수 있다. 국내에서 기독교 경제윤리가 논의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학자는 강원돈이다. 국내에서 그를 제외하고 기독교 경제 윤리는 언급될 수 없다.<sup>5)</sup>

1990년부터 수미일관 신학적인 관점에서 현실 경제문제를 학문의 주제로 설정하고 학문의 노정을 이어온 강원돈은 최근 신학, 윤리학, 그리고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경제윤리론-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을 저술했다.<sup>6)</sup> 이 책은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한다. 이 논문은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 방법론이 리히의 방법론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방법론의 유형에 관해서는 트라우고트 예

5) 최근 강원돈은 1,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기독교 경제윤리에 대한 저서를 출판했다. 강원돈, 『기독교 경제윤리론-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서울: 동연, 2024). 그는 각 장마다 “소결”로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그의 논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6) 이 책에 대한 서평으로 최경석, “강원돈의 『기독교경제윤리론 -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에 대한 서평,” 『신학사상』 205(2024), 303-314를 참조하라. 이 책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인터넷기사, 최형묵,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19>, 2024년 8월 9일 접속. 정용택,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76>, 2024년 8월 9일 접속. 홍인식,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19>, 2024년 8월 9일 접속을 참조하라.

니헨(Traugott Jähnichen)이 분류한 경제윤리의 유형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제II장에서 예니헨이 분류한 경제윤리 유형이 설명될 것이다. 제III장에서 리히와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 방법론이 언급되고 강원돈의 그것이 차지하는 유형이 고려될 것이다. 제IV장에서 두 명의 경제윤리 방법론의 유사성과 차이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가 가지는 특징이 언급될 것이다.

## II. 기독교 경제윤리의 유형연구<sup>7)</sup>

예니헨은 기독교 경제윤리가 포함된 기존의 경제윤리를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한다. 경제학을 윤리학을 통해서 교정하는 유형, 반대로 경제학이 윤리학을 수용하는 유형, 그리고 경제학과 윤리학 사이의 통합 속에서 매개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유형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리히와 강원돈의 경제윤리 방법론의 좌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도움이 된다.<sup>8)</sup>

### 1. 교정적 측면에서 경제윤리의 유형

먼저, 경제학을 윤리학을 통해서 교정하는 유형은 국민경제의 제도적 측면을 고려한다. 다시 말하면, 한 편으로 이 유형은 정부가 계획하여 경제를 통제하는 제도와, 다른 한 편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7) 이 장은 트라우고트 예니헨의 유형분류에 잇대어 기술한다. 다만, 학문적 도움을 위해 여기에서 언급된 인용된 경제윤리학자들의 참고문헌은 그들의 것이 기술된다. Traugott Jähnichen, *Wirtschaftsethik*.

8) 예니헨의 경제윤리에 대한 세 가지 유형들에 대한 독일어로 된 글로 Kyung Suk, Choi, "Auf dem Weg zu einer protestantischen Wirtschaftsethik,"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4/4(2022), 210-214을 참조하라.

장려하는 제도에서 윤리학을 먼저 고려하는 상이한 접근을 나눌 수 있다. 이른바 중앙계획경제에서는 ‘정의’라는 윤리 규범이 우선된다. 이와 반대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자유’라는 윤리 규범이 먼저 고려된다. 정의와 자유의 윤리 규범을 통해서 경제현상을 조정하는 경제윤리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이 유형은 두 가지 형태에서 발전된다. 먼저는 맑스주의(Marxismus)에 입각한 경제윤리학자들에게서 발견된다. 이들은 중앙계획경제제도를 시장경제제도보다 정의로운 제도로 인정한다. 이와 반대로,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의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옹호하면서 경제를 교정시키려는 경제윤리학자들이 있다.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경제를 교정하려는 기독교 경제윤리학자들로서 빈쉬<sup>9)</sup>와 에밀 폭스(Emil Fuchs)<sup>10)</sup> 그리고 울리히 두흐로(Ulrich Duchrow)가 언급될 수 있다. 빈쉬와 폭스는 맑스주의와 공산주의가 성행하던 1920년대와 1950년대 독일의 신학자들이다. 빈쉬는 경제를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무한경쟁과 이윤의 극대화 속에서 구성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커녕 오히려 사회적 궁핍으로 몰아가는 “악마(Dämonie)”<sup>11)</sup>이다. 국가가 계획하는 “사회주의적 세계 계획경제”<sup>12)</sup>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기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빈쉬는 강조한다.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폭스는 빈쉬와 유사함을 가진다. 역사의 발전에서 당시 서독의 역사를 이기심으로 가득한 경마로 비유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보다 풍성한 박애주의가 넘치는 세

9) 빈쉬는 독일 개신교신학에서 최초의 사회윤리 교수로 마부르크(Marburg) 대학에 초빙되었다. 이를 위해서 T. Jähnichen, *Wirtschaftsethik*, 72를 참조하라.

10) Emil Fuchs, *Christliche und marxistische Ethik. Lebenshaltung und Lebensverantwortung des Christen im Zeitalter des werdenden Sozialismus. Erster Teil* (Hamburg, 1957) 폭스는 동독의 신학자이다.

11) Georg Wünsch, “Wertethik,” in: *RGG*, 2. Aufl., Bd. 6, 1874면.

12) Georg Wünsch, *Evangelische Wirtschaftsethik*, 704이하.

상을 형성”<sup>13)</sup>시킨다고 폭스는 주장한다. 이 둘은 자본주의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이웃사랑의 배제를 주목한다. 반면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중앙계획경제는 기독교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제도임을 강조한다.

주지하듯이,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중앙계획경제가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경제적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확산된다. 이런 경제제도는 결국 인간의 사회가 시장에 장악되고 자연을 파괴하며, 자본이 우상으로 귀결되어 더 많은 자본을 가지려는 경제적 목표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해방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향에서 자본주의를 통한 경제적 지구화에 반대하는 요구가 일어난다. 울리히 두호로는 이런 경제적 지구화를 전체주의적 입장으로 본다. 그는 성서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 특히 바르멘 신학선언(Die 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에 근거해서 전체를 대변하지 않고 “작은 자들을 위한 선택적 결성”<sup>14)</sup>을 옹호한다.<sup>15)</sup>

위에서 언급된 학자들은 기존의 경제제도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면서 대안적 경제제도를 제시한다. 빈쉬와 폭스는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두호로는 경제적 지구화를 거부하면서 작은 자들 또는 지역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급진적 입장에서 서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기존의 경제제도를 인정하면서 경제의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민주적 절차를

13) Emil Fuchs, *Christliche und marxistische Ethik. Lebenshaltung und Lebensverantwortung des Christen im Zeitalter des werdenden Sozialismus*, 136.

14) Ulrich Duchrow, *Alternativen zur kapitalistischen Weltwirtschaft. Biblische Erinnerung und politische Ansätze zur Überwindung einer lebensbedrohenden Ökonomie* (Gütersloh/Mainz, 1994), 119.

15) 두호로는 구약성서적 전통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들여짐”으로부터 해방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집트의 전체주의로부터의 해방, 바빌론의 전체주의로부터 해방의 역사 속에서 전체주의 체제에서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하는 역사이다. 위의 책, 133.

통해서 경제를 규율하거나 교정하려는 입장을 옹호하는 경제윤리학자들이 존재한다.

칸트의 성향윤리의 영향을 받은 트라우은 시장경제를 옹호하지만 지나친 사리사욕과 과도한 영리추구를 시장경제의 위험 요소들로 지적하면서 경제의 주요 행위자들 특히 소비자로서 가계와 생산자로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sup>16)</sup> 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이 도덕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런 책임감 속에서 시장경제가 조정될 수 있다. 1990년대 기업을 윤리적 집합체로 바라보면서 기업 윤리에 대한 접근방식이 고려된다. 기업의 방향성과 이윤창출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기업이 자발적인 약속을 결정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조정될 수 있다.<sup>17)</sup> 프리드리히 헝스바흐(Fridrich Hensbach)는 자본주의가 민주적으로 운용되기를 희망하면서 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관심과 책임을 가지며 다수를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8)</sup>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은 더디지만 자본주의가 민주적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헝스바흐는 희망한다.

교정적 측면에서 경제윤리의 유형이 윤리, 즉 정의와 자유를 고려해서 경제를 규율하거나 교정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면, 수용적 측면에서 경제윤리의 유형은 이와는 반대로 윤리적 규범을 단지 시장경제의 기능이 성실히 작동되기 위한 상호보완적 요소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수용적 측면에서 경제윤리의 유형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다면,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오래된 규범인 상도(常道)나 신뢰 등의 윤리적 규범이 요구된다. 이런 윤리적 규범들을 통해서 시장경제에

16) Gottfried Traub, *Ethik und Kapitalismus. Grundzüge einer Sozialethik*, 250.

17) 이런 주장을 위해서 Horst Steinmann/Albert Löhr, *Grundlagen der Unternehmensethik* (Stuttgart: Kohlhammer, 1992)을 참조하라.

18) Friedhelm Hengsbach, *Wirtschaftsethik* (Freiburg, 1991), 153.

서 체결되는 계약과 합의가 공정한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용적 측면에서 경제윤리의 유형은 경제학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윤리를 보완적으로 수용하는 경제윤리의 유형이라 말할 수 있다.<sup>19)</sup>

## 2. 매개적 측면에서 경제윤리의 유형

위에서 언급된 유형들은 경제와 윤리 사이에서의 상위를 무엇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교정과 수용이라는 형태를 가진다. 매개적 측면에서 경제윤리의 유형은 경제와 윤리 사이에서 중재와 통합이 목표이다. 사회과학으로서 경제와 인문학으로서 윤리 모두 인간에 관한 것이기에 인간론에 중점을 두고 경제와 윤리 사이를 매개하려는 유형이다. 아이레르트 헤름스(Eilert Herms), 리히, 그리고 페터 울리히(Peter Ulrich)가 여기에 속한다. 리히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헤름스는 그의 신학적 인간론을 책임적 자유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말한다.<sup>20)</sup> 그는 이런 인간론을 기본으로 삼아 경제적 논리를 “인간존재의 조건들”<sup>21)</sup> 중 하나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는 인간들이 스스로 규정한 것으로 인간들의 삶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형태들 중 하나이다. 경제에 대한 헤름스의 이런 입장에서 인간 사회에서 공생과 연대를 위한 경제활동이 중요하다. 공생과 연대를 위해 이바지하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헤름스는 아담 스미스

19) Karl Homann, “Ökonomik: Fortsetzung der Ethik mit anderen Mitteln,” in: Georg Siebeck (H.g.), *Artibus ingenuis. Beiträge zur Theologie, Philosophie, Jurisprudenz und Ökonomik* (Tübingen: Mohr Siebeck, 2001), 92.

20) Eilert Hermsders, *Radical Empirism. Studien zur Psychologie, Metaphysik und Religionstheorie William Jame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77; 동저자, “Das Problem von ‘Sinn als Grundbegriff der Soziologie’ bei Niklas Luhmann,” in: *ZEE* 18. Jg.(1974), 341이하.

21) Eilert Herms, *Die Wirtschaft des Menschen* (Tübingen: Mohr Siebeck, 2004), X(Vorwort)

(Adam Smith)의 도덕철학과 연관시켜 “성숙한” 또는 “교육받은” 자기 이해의 태도를 수용한다.<sup>22)</sup> 헤름스의 경제윤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숙한 덕성이 경제에 침투하여 통합하려는 유형에 속한다.

올리히는 인간을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 보면서 윤리적 요구들과 경제적 합리성의 사고가 합병될 수 있다<sup>23)</sup>고 주장한다. 올리히에 따르면, 경제도 규범적이라는 의미이다. 윤리적 가치가 함유된 개념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운용이 발전될 수 있다.<sup>24)</sup> 경제는 합리적이기에 생활세계에서 고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이 필요하다. 경제적 합리성은 윤리적 가치가 없는 순수한 사실로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논리에 규범의 조건이 내재된 것으로 올리히는 강조한다.<sup>25)</sup> 이성에 근거한 합리성이 경제와 윤리에 모두 존재하기에, 이 둘의 관계는 대등하다. 여기에서 올리히는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담론윤리를 수용한다. 윤리와 경제가 공론의 장에서 담론을 통해 기업윤리를 제시하는 것이 올리히의 경제윤리의 목표이다.<sup>26)</sup> 윤리의 우위 속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윤리학으로 포함시키려는 방안인 것이다. 그래서 올리히의 경제윤리는 윤리적 규범을 통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규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윤리와 경제의 진솔한 대화 속에서 기업윤리를 제시하려는 통합형의 유형에 속한다.

22) 위의 책, 181이하.

23) Peter Ulrich, *Integrative Wirtschaftsethik-Grundlagen einer lebensdienlichen Ökonomie* (Bern, 1998) 14.

24) Peter Ulrich, “Sich im ethisch-politisch-ökonomischen Denken orientieren,” in: *Information Philosophie*, H.4(2002), 22.

25) Peter Ulrich, *Integrative Wirtschaftsethik* 11. 또한 125.

26) 위의 책, 79.

### III. 강원돈의 경제윤리 방법론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방법론은 독일어권 신학에서 논의된, 특히 리히의 그것과 비교하면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다. 강원돈은 민중신학의 틀 속에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원리와 방안을 고민하면서 경제윤리를 연구한다. 이 과정에서 두흐로의 경제윤리 연구서<sup>27)</sup>와 리히의 고전적인 경제윤리의 저작들<sup>28)</sup>을 번역한다. 리히는 자신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논리를 세 가지 단계로 전개한다.<sup>29)</sup> 강원돈의 방법론도 유사하게 세 단계이다. 우선 기독교 경제윤리의 목표가 설정되고, 다음에 현실 경제를 규율할 규범과 기준들을 찾으며,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한 준칙을 모색한다. 리히의 방법론은 간략히 묘사될 것이다.<sup>30)</sup> 리히의 방법론과 강원돈의 방법론 속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강원돈의 방법론의 위치와 그가 추구하는 방향이 언급될 수 있다.

#### 1. 리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방법론

리히는 인간부합적인 사회제도를 강조한다.<sup>31)</sup> 리히의 경제윤리의 궁

27) Ulrich Duchrow, 강원돈 옮김, 『하느님의 정치 경제와 민중운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0)

28)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I* 강원돈 옮김, 『경제윤리 1: 신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의 원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II* 강원돈 옮김, 『경제윤리 2: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시장경제, 계획경제, 세계경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29) 이와 같은 견해로, Traugott Jähnichen, *Wirtschaftsethik* 92-96. 또한 최경석, “기독교 경제윤리의 눈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154-157.

30) 리히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용훈, “아르투어 리히의 사회윤리 방법론,” 임성빈 외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동향 1』 (서울: 애영커뮤니케이션 1997) 221-257. 그리고 최경석, 위의 글을 참조하라.

31) “사실부합적이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인간부합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인간부합적인 것에

극적 목적은 경제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제도, 즉 좋은 삶과 정의로운 사회제도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리히의 경제윤리는 그래서 인간론을 바탕으로, 특히 신학적 인간론을 통해서 경제와 윤리 사이를 매개하고 통합하려는 유형에 속한다. 신학적으로 설정된 규범적인 기준을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매개하려는 시도가 리히의 경제윤리이다.

리히의 경제윤리의 근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입장은 “실존적 종말론”이다. 그는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를 수용하면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궁극적인 것과 궁극이전의 것을 매개시켜 구체적인 사회윤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인간 사회의 실존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이고 완전하다. 하나님 나라의 요구에 따라서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제도적 질서를 마련하는, 즉 “실존적 종말론”에 입각해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이 리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목표이다.<sup>32)</sup>

리히의 경제윤리의 방법론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목표설정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의 목표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학적 인간론에 입각해서 기독교적 인간 실존과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간 실존을 매개하고 관통할 인간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리히는 기독교의 경험에서 강조되고 발전된 인간성이 사회에서도 충분히 경험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인간성”<sup>33)</sup>을 제시한다. 이런 인간성이야말로 기독교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인간부합적인 것이다.

둘째,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인간성이란 목표가 설정된 후,

---

배치되는 것은 실제로 사실부합적인 것이 될 수 없다.”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II* 강원돈 역, 『경제윤리 2』 23.

32)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I* 187.

33) 위의 책, 118.

좋은 삶과 정의로운 사회제도의 형성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기반된 규범들을 찾는 단계가 필요하다. 현실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인간의 실존과 밀접한 인간부합적 규범을 리히는 “인간부합적인 것의 기준들”<sup>34)</sup>이라 명명한다. 리히는 총 일곱 가지의 인간부합적인 기준들을 제시한다. 다만, 이 수는 닫힌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의 사회에서 새롭게 제시될 열린 수이다. 이 기준들은 “피조성의 기준”, “비판적 거리의 기준”, “상대적 수용의 기준”, “상관성의 기준”, “이웃됨의 기준”, “공동피조성의 기준”, 그리고 “참여의 기준”이다. 이 기준들 중에서 리히의 경제윤리의 방법론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먼저, 종말론적 시각에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차이를 인정하는 “비판적 거리”의 기준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그다음, 이런 비판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상대적 수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것이 인간 사회에 상대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수용과정에서 일반인들이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윤리적 가치들이나 덕목들을 인간부합적으로 다루는 “상관성”의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수용된 하나님 나라의 덕목들이 인간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한다.

셋째, 리히의 경제윤리의 목표인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윤리적 기준들에 의한 판단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부합적인 것에서 비롯된 기준들과 사회질서에서 비롯된 사실부합적 요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과 매개 가능한 궁극이전의 것들이 제시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결과들을 도출해서 실현 가능한 행동을 제시할 “준칙”들이 고려되어야 한다.<sup>35)</sup> 신학적 인간성을 기본방침으

34) 위의 책, 198.

로 설정한 후, 여기에 적합한 규준들을 형성하고 준칙들을 제시하는 것이 리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사회제도가 형성될 수 있고 인간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리히는 명확한 준칙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리히 당시의 경제현상을 고려할 때, 계획경제 속에서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방안을 소극적 준칙으로 설정한다.<sup>36)</sup>

## 2.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방법론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목표는 선과 정의의 구현이다. 즉 현실 경제에서 보다 더 많은 선과 보다 더 많은 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경제윤리이다. 사실부합성이 강조되는 사회과학으로 현실 경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고, 인간부합성이 강조되는 윤리학으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이 설정되며, 이 원칙의 근거를 신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 경제윤리이다.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는 현실 경제를 신학적 관점을 통해 사회윤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제와 윤리를 서로 매개시켜 경제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신학에 뿌리를 박고 있는 원칙들에 의해 경제가 규율될 때, 그 정당성과 타당성을 공론의장에서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sup>37)</sup> 1,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론』에서 그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을 관통하는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방법론은 리히의 그것과 유사하다. 강원돈 방법론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단계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고 다음장에서 강원돈의 기독교 경

35) 위의 책, 257.

36) 리히는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II*에서 준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37) 강원돈, 『기독교 경제윤리론』 33.

제윤리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기독교 경제윤리에 있어서 윤리적 규범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신학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 규범은 다시금 생활세계의 언어로 가공되어 공론의 장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상대적인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들과 경제문제들을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정의 사이에서의 매개를 통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것이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목표이다.<sup>38)</sup> 이에 대한 강원돈의 신학적 입장은 창조와 종말 사이의 구원사를 고려하는 “구원사에 바탕을 둔 경제윤리”<sup>39)</sup>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것에 가까운 것인 궁극이전의 것을 제도적으로 형성시키기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구원사의 빛에서 사회제도를 형성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사의 빛에서 본 제도 형성의 책임”<sup>40)</sup>을 가지고 궁극적인 것의 빛에서 궁극이전의 것이 투명해지도록 세상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

둘째,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세상인 창조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종말로 가는 그 사이의 구원사에서 경제윤리의 규범을 찾는 강원돈의 “구원사에 바탕을 둔 경제윤리”에서 다음 단계인 원칙들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돈은 이 원칙들을 철저히 성서에 기반해서 찾아낸다. 절대적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것과 상대적 세상의 궁극이전의 것 사이의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서 궁극적인 것에 대한 근사치로서 실현가능한 궁극이전의 것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의 원칙들이 제시된다. 이 원칙들은 철저히 성서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성서에 기반한 원칙들은 생활세계

38) 위의 책, 65.

39) 위의 책.

40)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위의 책, 66-84을 참조하라.

의 언어로 치환되어 사회에서 통용성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경제와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의 원칙”<sup>41)</sup>, 생명체가 가지는 권리가 인정되고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이 보장받는 “생태계 보전의 원칙”<sup>42)</sup>,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성을 회복하는 “정의의 원칙”<sup>43)</sup>,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적으로 은혜받은 존재로서 누려야 할 “인간 존엄성 보장의 원칙”<sup>44)</sup>이다.

셋째, 성서적 근거 속에서 설정된 네 가지 원칙들을 통해서 현실경제인 시장경제가 규율될 방식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실천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궁극이전의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강원돈은 현실 시장경제를 규율할 유력한 방식을 “경제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sup>45)</sup> 강원돈이 제시하는 “경제민주주의”의 구상은 단순히 표상되거나 선언적인 정치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이다.<sup>46)</sup> 이런 사회적이고 동시에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가 준칙으로 설정된 후에 이 관점에서 현실 시장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석되고 이를 규율할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sup>47)</sup>

이렇게 볼 때,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는 예니헨이 제시한 경제윤리의 방법론의 유형들 중에서 “매개적 측면에서 경제윤리의 유형”에 속한다

41) 특히 노동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 위의 책, 87-89을 참조하라.

42) 위의 책, 89-94.

43) 위의 책, 94-107.

44) 위의 책, 108-111.

45) 위의 책, 253.

46) 강원돈의 위의 책의 부제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7) 위의 책, 653-1176. 책의 후반부 제VI부 토지공개념부터 제XI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세계무역체제의 규율까지 책의 절반 가량이 여기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 표상될 수 있는 인간성에 입각한 윤리가 경제에 매개하여 규율하는 형식으로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는 작동되기 때문이다. 리히의 방법론과 유사할지라도, 강원돈의 경제민주주의의 준칙은 공론의 장에서 담론윤리의 형식을 거쳐 기업윤리를 제시하려는 울리히의 방법론과 비교를 통해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 IV.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특징

리히의 기독교 경제윤리 방법론과 강원돈의 그것의 유사함, 즉 기독교 경제윤리의 목표와 원칙들의 설정, 그리고 준칙이나 경제현상을 규율할 실천을 제시하는 방법이 유사하다. 리히와 강원돈 모두 현실 경제현상을 철저히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러나 경제현상에 대한 신학적 분석에 있어서 리히가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을 취한다면, 강원돈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서로 구별되는 특징이다. 예컨대, 리히가 당시의 경제를 시장경제, 계획경제, 그리고 세계경제로 나누어 분석했다면, 강원돈은 리히가 주목할 수 없었던 오늘날 AI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현상까지 방대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 1. 리히와의 비교를 통한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

신학적 인간성을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신학적으로 기준들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준칙으로서 사회제도를 형성 발전시키는 것이 리히와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 방법론이다. 첫째, 기본방침을 세움에 있어서 신학적 종말론(리히의 경우 “실존적 종말론”, 강원돈의 경우 “구원사의 바탕”)에 입각에서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동일한

목표이다. 아울러 본회피의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궁극적인 것과 궁극이전의 것을 매개시켜 구체적인 사회윤리의 형성이 가능하다. 신학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경제를 규율하려는 입장도 유사하다. 다만, 리히는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간 실존을 통한 것이라면, 강원돈은 사회제도를 형성시키는 “책임감”이라는 실천적 인간성을 강조한다.

둘째, 정의로운 사회제도의 형성을 위해 규율할 기준들이 신학적이면서 동시에 생활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정식화된 것은 리히와 강원돈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 기준들의 수는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 기준 설정에 있어서 리히는 신학적인 측면<sup>48)</sup>에서 보다 강조해서 설명한다면, 강원돈은 성서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셋째, 준칙설정에서 리히와 비교한다면,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경제민주주의”의 준칙이 현실 경제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점이다. 리히에게서 명확한 준칙 설정은 희미하다. 다만, 리히는 당시 경제현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경제를 다소의 비교우위로 선정하면서 계획경제 속에서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방안을 소극적 준칙으로 설정한다.<sup>49)</sup> 리히가 제시한 준칙설정을 고려할 때, 강원돈은 보다 적극적인 준칙을 제시한다. “경제민주주의”의 준칙 속에서 현실 경제현상에서 나타나는 “토지공개념과 지대공유경제”,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기본소득 구상”, “재정과 금융의 민주적 통제”, “달러 패권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세계통화제체의 형성”,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그 대안”, 그리고 “세계무역체제의 규율”에 관한 주제들을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앞서 설정

48) 리히의 경우, 일곱 가지의 기준 설정은 존재론(피조성의 기준), 인간론(비판적 거리의 기준과 상대적 수용의 기준), 종말론(상관성의 기준, 이웃됨의 기준), 그리고 창조론(공동피조성의 기준과 참여의 기준)의 신학적 입장에서 기술된다. 보다 자세히 보려면,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I* 199-232를 참조하라.

49)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II* 258.

한 성서적 원칙들을 적용시켜 현실시장경제를 규율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모색된다.

## 2. 시장경제를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

강원돈이 제시하는 준칙으로서 시장경제를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학적 입장은 “구원사에 바탕을 둔 경제윤리”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 경제윤리는 사회과학의 방식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과학적으로 경제의 정의가 필요하다. 강원돈이 정의하는 경제는 『기독교 경제윤리론』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경제는 “사람들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태계로부터 끌어들이는 물질과 에너지를 욕망 충족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어 소비하고 그 부산물을 생태계에 방출하는 과정”<sup>50)</sup>이다. 경제를 정의내림에 있어서 이미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관점이 내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경제를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고려하다보니, 생태문제와 사회적 가난은 별도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둘은 현실 시장경제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문제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선택할 것인지 해체할 것인지에 대한 양자택일의 문제로 빠질 수 있다.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가난의 해결과 동시에 생태의 보전을 보전이 가능한 것인가? 시장경제는 생태문제와 사회적 가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니 시장경제가 해체되어야 할 것인가? 강원돈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러한 양자택일을 넘어서는다. 현실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제3의 길에 대한 논의를 강원돈은 고민하고 그의 경제윤리를 발전시킨다.

50) 강원돈, 『기독교 경제윤리론』 117, 173 등

신학적 입장에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가까운,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 보다 정의로운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현실 경제제도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런 요구들에 대한 응답이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이다. 정의를 관계성의 회복으로 보는 강원돈의 입장<sup>51)</sup>에서 보다 정의로운 경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인간과 인간의, 그리고 인간과 생태계가 맺었던 공동피조물로서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제도로써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윤리적 판단기준의 설정과 거기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경제제도의 운용에 대한 지침들을 제시하며 전망을 가지는 현실주의의 입장이 강원돈이 추구하는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이다.<sup>52)</sup>

성서적, 신학적으로 숙고된 근거들과 윤리적 판단기준들은 생활세계에서 납득 가능하고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입장에서 산출된 이런 근거와 기준들을 공론의 장에서 생활세계의 언어로 정제되는 과정을 거친 후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정식화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절대적이며 궁극적 하나님 나라와 상대적이며 궁극이전의 세상을 매개하는 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미 구원받은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 긴장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구원사에 바탕을 둔 경제윤리”는 보다 정의로운 제도를 형성할 가능성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고 있다.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목표설정은 본회퍼의 형성윤리와 책임윤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사회윤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기독교 경제윤리의 주체가 되는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형성

51) 위의 책, 97.

52) 위의 책, 112.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경제제도를 형성하고 규율하기 위해서 강원돈은 성서적 근거에서 네 가지 원칙들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것과 궁극이전의 것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실현가능한 것들을 위한 네 가지의 원칙들은 “참여의 원칙”, “생태계 보전의 원칙”, “정의의 원칙”, 그리고 “인간 존엄성 보장의 원칙”이다. 네 가지 원칙들은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성서적 근거속에서 산출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자립적인 주체이다. 자립적 주체로서 인간은 서로 사회적 파트너의 관계로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에 참여한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 받은 경제의 위임과 문화의 위임이다. 창세기 1장 전체와 2장 4절 상반절까지의 첫 번째 창조이야기를 근거로 삼은 이 원칙이 첫 번째 참여의 원칙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경제와 문화 형성의 위임을 받아 그 활동에 참여할 때, 필연적으로 생태계의 생명체들과 무생물들을 만난다. 생태계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임을 실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도 권리를 주신 것을 유념해야 한다. 즉 생태계가 가지는 권리인 “자연의 권리”<sup>53)</sup>가 인정받고, 생태계가 안정함 속에서 유지되고, 그리고 건강함을 보장받도록 인간의 경제활동이 규율되어야 한다. 또한 창조신학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난 하나님의 안식이 주목된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받는 대상들은 모든 피조물들이다. 안식은 생명의 파괴가 없는 상생과 공생의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된 날이다. 주목할 것은 이 안식의 대리자가 인간인 것이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생태계를 보

53) 강원돈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경제윤리를 발전시킬 때,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자연의 권리”이다. “자연의 권리”가 헌법 규범으로 정식화되어 “생태학적 법치국가” 확립으로 발전할 때, 생태학적 경제민주주의의 형성이 가능하다. “자연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위의 책, 362-380을 참조하라.

전시켜야 한다. 이 원칙은 두 번째 생태계 보전의 원칙이다.

창조신학, 특히 인간의 타락 이후에 경제활동을 규율할 원칙이 도출된다. 엄격히 본다면, 인간의 타락 이후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 다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치우며 경작하는 노동 속에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돈이 고려하고 있는 정의는 관계성 회복이다. 노동하는 인간은 그래서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자신의 노동을 활용해야 한다. 강압적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sup>54)</sup> 이와 더불어 남아 있는 하나의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저주받은 땅과의, 즉 생태계와의 관계성 회복이 생태학적 정의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세 번째 정의의 원칙이다.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인간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위임자로서 비록 타락했지만, 그 이후에 노동을 통한 축복을 받는다.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인간의 표상은 바른 관계성을 회복할 존엄한 존재이다. 강원돈은 인간의 존엄성을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론과 연결시킨다. 즉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기에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마지막 원칙인 인간 존엄성의 원칙이 세워진다.

신학적으로 기독교 경제윤리의 목표가 설정되고, 성서적으로 원칙들이 도출된 후, 이를 통해 현실 시장경제를 해체시키지 않고 보다 정의로운 경제제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준칙을 정식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강원돈은 시장경제를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54) 강원돈은 히브리인들의 이집트의 탈출과 그 이후 제시된 신명기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여기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위의 책, 96-100.

인 경제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 실현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위해서 현실경제인 시장경제의 체제를 분석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경제에 대한 정의를 고려한다면, 시장경제는 사회적 가난을 양산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제도와 매우 가깝다. 이런 시장경제제도가기에 이를 해체하려는 과격한 입장에 강원돈은 서있지 않다. 오히려 시장경제를 역사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에서 파헤치는 분석이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강원돈은 시장경제를 역사적으로 분석한다.<sup>55)</sup> 시장경제제도가 자유에 의해서 운용되지만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기구가 있음을 그는 지적한다. 그 기구는 바로 국가이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적 가난을 심화시키는 현실 시장경제를 극복하며 기독교 경제윤리의 입장에서 관계성의 회복이라는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국가이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가게라는 경제의 주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 상품을 생산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물적 강제를 통해서 가격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점들은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원돈은 지적한다.<sup>56)</sup> 시장경제의 구조는 생태계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에 생태학적 정의를 위해서 구조적 문제점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구조적 관점에서 생태계의 권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역사적, 구조적으로 파악된 시장경제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를 규율할 윤리적 제도 마련이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로 밝혀진다. 궁극적인 것과 궁극이전의 것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를 위해 강원

55) 시장경제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위해서는 위의 책, 119-166를 참조하라.

56) 시장경제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위해서는 위의 책, 167-242를 참조하라.

돈은 “경제민주주의”<sup>57)</sup>를 제시한다. 그는 “경제민주주의”의 모델들의 역사<sup>58)</sup>, 시장경제를 생태학적으로 규율할 방법, 그리고 사회적으로 규율할 방법을 기술한다.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것들이 아주 짧게 요약될 것이다.

강원돈은 “경제민주주의”를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유력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경제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던 네 가지의 모델들이 제시된다. 이 모델의 발전과 실패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민주주의 주체들이다. 큰 틀에서 국가, 기업, 그리고 노동자라는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민주적으로 합의하여 모델이 발전되고 실패하는 묘사를 통해 나온 결론은 경제민주주의 형태는 시대와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경제민주주의 형태를 위해 유의해야 할 것들이 필요하다.

우선 노동과 자본의 관계 속에서 민주화가 필요하다. 시장경제의 근본적 문제들을 최대한으로 해결하는 시도를 경제민주주의로 볼 때, 민주주의라는 의미에서 최소한 두 종류 이상의 단체가 필요하다. 여기서 단체란 국가, 기업이 단체들, 그리고 노동자 단체들을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에서 약자로 인정받는 노동자 단체들의 입장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 형성이 필요하다.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적으로 대등한 권리를 지닌 노동자 단체들이 형성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현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자들의 권력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과 노동양극화의 극복이 그 난제들 중 하나이다. 아울러 최근과 같이, AI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노동 소멸화를

57) 강원돈의 “경제민주주의”의 구상에 대해서는 위의 책, 253-650를 참조하라.

58) 강원돈은 마르크스에서 파생된 “코뮌주의 경제 구상”과 이를 실험한 유고슬라비아의 경제체도를 소개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과 이들과 유사하지만 자신들의 길드 조직을 통한 “길드 사회주의자들”이 구상한 경제민주주의를 언급한다. 1928년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이 구상한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입금노동자기금”을 통해서 경제민주주의 모델들을 언급한다. 위의 책, 258-311.

경험하고 있는 시기에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가 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sup>59)</sup>

강원돈은 경제민주주의가 전개되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생태학적이고 사회적 규율할 제도를 고민한다. 먼저 그는 생태학적 규율을 제시한다. 그는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와 기후 파괴의 주범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만나 작동하는 시장경제체제로 보고 있다.<sup>60)</sup> 이런 위기와 파괴에 대한 주요한 요인은 자본의 축적과 팽창 체제이다. 생태학적으로 시장경제를 규율하여 경제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보전하려는 조건 속에서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는 것이다. 생태계의 권익을 대표하는 주체와 경제계의 권익을 대표하는 주체들이 필요하며 이들 사이에서 대등한 관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생태계와 경제계의 권력 균형과 이익 균형을 제도적으로 실현시킬 헌법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헌법

59) 어쩌면 노동소득 대신 기본소득에 의존하여 소수의 디지털 기술자들에 의해 통치받는 대다수의 인간들이 양산될 수도 있다. 이런 시기에도 여전히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작동된다면, 자본의 독재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런 시기가 도래할 경우, 노동의 해방과 생태계의 해방에 이바지하도록 자본의 독재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방안의 제시일 것이다. 이런 난제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주의에서 제시될 방안들, 그리고 과제들에 대해서 위의 책, 제VI부부터 제XI부까지 기술되어 있다. 위 내용들은 경제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방안을 목표로 현실경제와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과 대안들이 제시된다. 문제 해결에 관한 강원돈의 방안 제시가 경제민주주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제VI부 토지공개념과 지대공유경제, 제VII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기본소득 구상, 제VIII부 재정과 금융의 민주적 통제, 제IX부 달러 패권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세계통화체제의 형성, 제X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그 대안, 그리고 제XI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세계 무역체제의 규율, 이 장들에서는 각 주제에 따른 경제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앞서 설정한 성서적 원칙들을 적용시켜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현실시장경제를 규율할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방안들은 종말을 향해 가는 “구원사에 바탕을 둔 경제윤리”를 목표로 삼아 구상된다. 여기에서 논의된 주제들은 이를 연구할 학자들의 선행연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60) 생태학적 규율을 위해서 위의 책, 341-414를 참조하라.

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한 생태학적 헌정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단순한 환경보전을 넘어서 자연물에게도 법적 지위가 부여된 “자연국가” 또는 “생태학적 법치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sup>61)</sup> 강원돈은 생태학적 입장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의 권리와 이익, 인간의 권리와 이익 사이의 변증법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제시한다.<sup>62)</sup>

경제민주주의가 취해야 할 두 번째 입장은 사회적 규율을 고려하는 것이다. 강원돈에 따르면, 사회적 규율이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sup>63)</sup> 경제활동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중심의 경제민주주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권과 소유권 사이의 상호불가침과 제한성을 헌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두 권력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장치는 어떤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공동결정권이다. 노동자에게 공동결정권이 부여됨으로써 시장경제를 사회적으로 규율할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들 사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원돈은 주장한다.

## V. 나가는 말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 방법론은 리히의 그것과 유사하다. “경제민주주의”라는 준칙설정에 있어서 강원돈의 방법론이 리히보다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주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강원돈은 올리히의 담론윤리의 확장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준칙으로 제안함으로써 올리히와 유사하나,

61) 위의 책, 371.

62) 이를 위해서 강원돈은 구체적으로 “생태학적 소유권의 개혁”,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 개입과 가격 장치의 보완”, 그리고 “생태학적 국민소득분배”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책, 381-411.

63) 위의 책, 417.

규준을 배제하여 신학적 입장과 거리가 멀어지는 율리히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 그는 리히의 규준설정을 수용하면서 현실경제에서 실현 가능한 준칙인 “경제민주주의”를 설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강원돈의 경제윤리도 신학적 인간성을 근거로 삼아 인간론이 경제와 윤리 사이의 매개를 통한 통합형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돈의 경제윤리는 현실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가난과 생태계의 파괴를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본다. 기독교 경제윤리는 이를 묵과할 수 없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궁극이전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대안은 강원돈 교수의 『기독교 경제윤리론』에서 제시될 수 있다.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실현시킴으로써 시장경제를 규율할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의 제도는 성서적이고 신학적 뿌리에서 자라나서 생활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정식화된 논리이다.

현대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발전한다. 그럼에도 경제체제는 여전히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운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고,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회복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철저히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서 있고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성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강원돈이 추구하는 기독교 경제윤리는 이런 의미에서 궁극이전의 것이며, 실현 가능한 준칙이다. 시장경제를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강원돈의 구상은 기독교 경제윤리학의 중심주제로 자리잡기 충분하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이자 교회의 책무이다.

## 참고문헌

- 강원돈. 『기독교 경제윤리론-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서울: 동연, 2024.
- 조용훈. “아르투어 리히의 사회윤리 방법론.” 임성빈 외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동향 1』 서울: 애영커뮤니케이션, 1997. 221-257.
- 최경석. “기독교 경제윤리의 눈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151-173.
- \_\_\_\_\_. “강원돈의 『기독교경제윤리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에 대한 서평.” 『신학사상』 205 (2024), 303-314
- Choi, Kyung Suk. “Auf dem Weg zu einer protestantischen Wirtschaftsethik.”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4/4 (2022), 210-214.
- Duchrow, Ulrich, 강원돈 옮김. 『하느님의 정치 경제와 민중운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0.
- \_\_\_\_\_. *Alternativen zur kapitalistischen Weltwirtschaft. Biblische Erinnerung und politische Ansätze zur Überwindung einer lebensbedrohenden Ökonomie.* Gütersloh/Mainz, 1994.
- Fuchs, Emil. *Christliche und marxistische Ethik. Lebenshaltung und Lebensverantwortung des Christen im Zeitalter des werdenden Sozialismus. Erster Teil.* Hamburg, 1957.
- Hengsbach, Friedhelm. *Wirtschaftsethik.* Freiburg, 1991.
- Hermesders, Eilert. “Das Problem von “Sinn als Grundbegriff der Soziologie” bei Niklas Luhmann,“ in: *ZEE* 18, Jg. (1974)
- \_\_\_\_\_. *Radical Empirism. Studien zur Psychologie, Metaphysik und Religionstheorie William Jame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77.
- \_\_\_\_\_. *Die Wirtschaft des Menschen.*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Homann, Karl. “Ökonomik: Fortsetzung der Ethik mit anderen Mitteln,” in: Siebeck, Georg (H.g.). *Artibus ingenuis. Beiträge zur Theologie, Philosophie, Jurisprudenz und Ökonomik.* Tübingen: Mohr Siebeck, 2001.

- Jähnichen, Traugott. *Wirtschaftsethik. Konstellationen - Verantwortungsebene - Handlungsfelder*. Stuttgart: Kohlhammer, 2008.
- Rich, Arthur. *Wirtschaftsethik I*. 강원돈 옮김, 『경제윤리 1: 신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의 원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 \_\_\_\_\_. *Wirtschaftsethik II*, 강원돈 옮김, 『경제윤리 2: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시장경제, 계획경제, 세계경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 Steinmann, Horst/Löhr, Albert. *Grundlagen der Unternehmensethik*. Stuttgart: Kohlhammer, 1992.
- Traub, Gottfried. *Ethik und Kapitalismus. Grundzüge einer Sozialethik*. Heilbronn, 1905.
- Ulrich, Peter. *Integrative Wirtschaftsethik-Grundlagen einer lebensdienlichen Ökonomie*. Bern, 1998.
- \_\_\_\_\_. "Sich im ethisch-politisch-ökonomischen Denken orientieren." in: *Information Philosophie* H.4(2002), 22-31.
- Wünsch, Georg. *Evangelische Wirtschaftsethik*. Tübingen: Mohr Siebeck, 1927.
- \_\_\_\_\_. "Wertethik." in: *RGG*, 2. Aufl., Bd. 6, 1964-1971.

논문투고일: 2024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4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8월 02일

---

• 국 문 초 록 •

---

강원돈의 신학의 주제는 기독교 경제윤리이다. 그는 1990년부터 수미일관 신학적인 관점에서 현실 경제문제를 학문의 주제로 설정하고 학문의 노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신학, 윤리학, 그리고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경제윤리론-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을 저술했다. 신학적 인간성을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신학적으로 규준들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준칙으로서 사회제도를 형성 발전시키는 것이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 방법론이다.

그는 “경제민주주의”를 현실경제에서 실현가능한 준칙으로 설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강원돈의 경제윤리도 신학적 인간성을 근거로 삼아 인간론이 경제와 윤리의 매개를 지향하는 통합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시장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경제민주주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위치 조정이 중요하다. 아울러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한 생태학적 헌정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제어:** 강원돈, 기독교 경제윤리, 경제민주주의, 사회적 규율, 생태학적 규율

---